

미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 동향

1.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

(1) 국제경쟁력 강화 중점 시책

국제경쟁면에서는 산업계의 Apple 스카리會長 등으로부터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클린턴정부의 중장기적 경제정책으로써, 美國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중시한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쟁력 강화의 방책으로서는 부시정권 당시에 소외되었던 「産業政策的」 접근방식이 적극적으로 수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클린턴 대통령으로써는, 이것을 「국가경제전략」으로 환언하여,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갈 方法을 모색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경제전략의 커다란 기둥이 되는 것은 하버드大學 교수인 로버트 라이슈 교수이며, 이번에 라이슈 교수가 노동장관으로 내각에 들어갔으므로, 구체적 정책으로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슈 교수는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투자의 확대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 산업정책의 충실 등의 의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通商面에서는 기업의 글로벌화를 인식하여, 자유무역을 유지하면서, 미국경제의 재생을 도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同교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① 경제의 Globalism에 대하여 긍정적인, Global Citizen Ship을 제창하였다. 외국기업이라도 美國內에 투자하여, 미국경제의 강화발전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불편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이와 같은 투자의 원활화를 위하여, 고도로 교육을 받아서, 훈련된

미국인 노동자의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해외제국의 하이테크 산업의 대부분이 보호되고,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경쟁력 유지, 강화의 시점에서 미국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써는 R&D稅 우대조치, 연구개발, 제조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공급을 실시해야 될 것이다.

③ 공정무역지향. 상대국의 무역장해 정도에 따라서 美國側도 무역장해 조치를 실시해야 될 것이다. 또한, 라이슈 교수는 경제경쟁력 강화의 방책으로써 「인적자원의 투자」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今回の 노동장관으로써 경제전략에 따른 교육개혁, 인재양성 대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로써 캘리포니아 大學 버클리大 교수의 타이슨여사가 정권에 참가함으로써, 경제 내셔널리즘의 소리도 동시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슨여사는 무역과 경쟁력정책이 전문이지만, 고전적인 경제학과는 일정거리를 유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원하는 말하자면 「관리무역」의 지지자라고 생각되고 있다. 통상문제에 대해서도 해외제국이 하이테크산업 등의 지원책에 의해 시장개입을 실시한다면, 미국도 역시 마켓 메카니즘에 맡길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실시 해야한다.

이와 같이 경제, 통상 분야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각료의 기용으로 클린턴 정부로써는 이 의견을 그때, 그때의 정책메뉴로써 대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설치된 新경제안전보장회의(NEC)에 대해서는, 그 위치설정, 역할에 대하여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상기의 정권내부의 여러가지 경제전략을 둘러싼 의견 및 재정 운영과 경기대책의 균형을 취하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 실시한다는 종합조정역할 입장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번 인사에서, 상무장관이 된 로날드 브라운氏は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통령선거의 당내 정리에 수완을 발휘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장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商務省이 첨단기술 개발의 추진, 미국산업의 수출진흥에 보다 명확하고 강력한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경영전략의 실행기관으로써 위치설정된 표현이다. 또한 日本 등과의 통상교섭의 책임자인 美國 통상대표부(USTR)대표에 대해서는, 대일 강경파, 자유무역파 사이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연출되었는데, 결국 그 어느 쪽도 아닌 로스 앤젤레스의 변호사이며 日本과의 관계도 깊은 미키 캔터氏가 지명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통상정책으로써는 수퍼301條(불공정무역협정 준수 상황에 대한 민간기업으로부터의 조사발동 청구) 등을 지지하고 있다. 신정권에서는 이 通商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외국시장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함께, 반덤핑法과 獨禁法의 역외적용에도 현정권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단, 현정권의 경제자문진으로부터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 기업의 글로벌화 등의 실태를 근거로 하여 대응해 나아갈 것으로 생각된다.

(2) 北美자유무역 협정(NAFTA)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은 지난 12月 17日 조인을 실시하여, 이것에 의해 역내 총인구 3億 6,000万名の 거대시장이 1994년에 탄생될 것을 결정하였다. 이 협정에 대해서는 부시정부 당시에 골격이 완성되었는데, 클린턴 대통령도 원칙적으로 NAFTA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민주당內에는 이 협정

이 초래하는 미국內 고용에 대한 영향, 멕시코에서 환경보호 대책면에서의 염려가 강력한데, 이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은 이것에 대하여 멕시코측과 보완협정체결 作業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2. 미국의 하이테크정책 방향

클린턴 대통령의 하이테크 산업관련 시책에 대해서는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실시해야 될 기술정책은 유세中에 발표된 정책제언 레포트에 구체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이 레포트에서는 클린턴의 경제정책 어젠더인 「Putting People Fast(국민우선)」의 입장에서 서서 하이테크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무엇을 착수할까를 진술하고 있다. 이것은 클린턴의 측근인 진 스페어링(경제정책 자문위원), 톰 슈나이더(과학기술 정책조정관), 에리스 모터(과학기술 정책조정관), 에리스 못터(아칸소주 정부기술정책 담당) 등이 민주당 지도자회의系의 Think Tank인 PPI(Progressive Policy Institute)의 협력을 얻어서 정리한 것으로서 일컬어지고 있다. 今後の 클린턴정권의 과학기술관련 시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기술 : 경제성장의 원동력」 리포트의 개요

클린턴 정부의 기술정책은 주로 고어 부통령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기업의 Needs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포럼을 설치할 것, 또한 대통령부과학기술국(OSTP)의 체제강화를 도모하는 것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의 6개항을 중점사항으로 들고 있다.

- ① 21세기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전국 통신 네트워크의 구축 등)
- ② 고도의 기능을 갖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확립(전국 시험제도의 도입, 전국 서비스 신탁기금

의 설립 등)

- ③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전국기술보급 서비스의 창출,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의 확충)
- ④ 산업기능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수요의 기술에 대한 연방 R&D 프로그램의 재중점화(비국방분야의 연방정부 R&D지출비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증대).
- ⑤ 국가적 R&D 투자의 확대(NIST의 강화, 관민공동 연구의 촉진 등)
- ⑥ 민간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사업 환경조성(R&D투자자의 인센티브, 확고한 무역정책, 反트라스트法 개혁 등)

(2) 「기술: 경제성장의 원동력」의 평가

이 리포트에서 들고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벌써 부시 정부화에서 실시로 이전된 것도 많고, 또한 민간단체 의회 등에서 제안되고 있는 아이디어를 정리한 것인데, 미국의 하이테크 경쟁력을 강화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관계자의 컨센서스 메모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중점과제에 대해서는 美國의 컴퓨터업체인 CSPP(Computer Systems Policy Project)의 「미국의 기술·무역정책의 전망」에서 들고 있는 정책 어젠더가 망라되어 있다. 즉, 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② 고성능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적극적 추진, ③ 전국정보네트워크의 정비, ④ 기업환경의 정비(反트러스트法의 개혁, 수출 라이선싱 시스템의 효율화)의 내용에 대하여 클린턴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 레포트중에서 고어 부통령이 하이테크 대책을 총괄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고어 부통령은 의회내에서도 빙가반과 그렌, 혼링 및 과학기술정책이 밝다고 하는데, 컴퓨터·통신업계에도 지극히 가깝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고어 부통령이 고성능

컴퓨팅법안의 제안자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정책제언의 대부분이 日本의 시책을 참고로 하고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通産省의 국가 프로젝트성격의 산학관의 연대 프로젝트의 추진, NTT의 ISDN(디지털 綜合통신망)의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대책으로써 공설시험센터의 설치 등이 모델이 되어 있는데, 日本의 민간기술 中心의 산업과학 기술정책을 배워, 관민협조형 촉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세이다.

단, 이 정책실시가 어느 정도 미국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 모두 미국기업의 중장기적인 연구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단기적인 경기대책에 비치는 효과는 제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책의 실시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정부담을 동반한 것으로써, 클린턴 정부의 재정적자 삭감의 요청中에서 어느 정도 대담한 지출을 낼 수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이익유도에 경주하기 쉬운 의회에 대항하여 어디까지 정책적 과제를 추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하여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3. 미국의 환경정책 방향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까지 없었던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에서는 환경문제으로써 절멸생물의 보호, 국립공원 보호, 습지대 보호, 지구온난화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부시정부는 어느쪽인가하면,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환경문제에 대응한 것에 반하여, 클린턴은 선거전을 통하여 고어 부통령을 중심으로 환경보호를 경제성장과 같은 정도로 위치설정할 것을 주장하여, 환경보호단체로부터의 지원을 약속한 경위도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연비효율을 2000년까지 가솔린 1가론당 4마일까지 상승시키고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부시는 안전성이 결여된 소형

차의 증가와 규제를 클리어 할 수 없는 공장의 고용삭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써 반대한다에 대하여, 클린턴은 '스마트 에너지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고용증가와 국제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다'. 北美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멕시코 진출기업에 대한 환경차원의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한 범위를 설정한 방침인 환경보호중시의 자세가 보여진다. 이것에 대하여, 산업계로서는 코스트업 요인이 되어 경제성장에 대하여 부담이 된다는 비판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非정부측으로부터도 환경정비, 환경기술개발 투자 등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자증대로 연결되는 것으로써 반발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에 대하여, 클린턴 정부는 「환경규제가 환경관련 산업을 자극하여, 고용창출로 연결」, 「공공투자와 재정적삭감의 균형을 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는데, 현실문제로서의 규제에 의해서는 기업측에 코스트부담의 증대를 강요한다는 것은 향후, 우려점이라 예상된다.

4. 美國컴퓨터업계의 반응

클린턴 정부에 대해서는 하이테크산업의 전형인 컴퓨터산업계로서는 선거전中에 지원 자세를 취해 왔다.

CSPP에서는 현재까지 부시 정부하에서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구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일관하여 나라의 개입을 배제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위임해야 될 입장이므로, 산업정책적 접근방식에는 소극적 자세를 취해왔다. 이것에 대하여 실리콘 벨리 등 치열한 국제경쟁력이 과열되고 있는 산업측에서는 불만이 쌓인 것이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실정하에서, 종래 共和黨系인 컴퓨터업계 경영자가 전부 클린턴 후보 지지로 돌린다는 이례적인 사례가 되었다. 지난해 9월에 스카리 애플회장, 존 영 HP前회장

등 실리콘 벨리 지역의 경영자 30명이 기자회견에서 클린턴 후보지지를 표명하여 이것이 클린턴후보의 승리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클린턴 고어 정권下에서는 현재까지는 비밀스러운 형태로 추진해 온 하이테크 산업기술진흥책을 정책적으로 위치설정함으로써, 국가가 적극적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지원을 착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업계에 대하여 순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민간기업의 R&D 촉진을 위하여 R&D 관련 세액공제의 항구화를 표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성능 컴퓨터法案(HPPC)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기반설비의 정비적인 위치설정에서의 의료정보시스템, 교육시스템, 제조시스템 등 고성능 컴퓨터통신기술 응용시스템 개발까지를 포함해 나아갈 방향에서 논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클린턴 정부하에서는 산업계로부터의 요청이 높아 수출관리제도의 수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의 냉전구조의 변화에 따라, 수출관리 정책의 위치설정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동서무역에 관한 현재까지의 관리시스템은 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동향은 기타의 선진공업국과의 대비에서 과도라고 할 수 있고 부담이 되는 수출관리제도의 개정에 의해 미국의 국제경쟁력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써 산업계에서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산업계에서는 美國 기업간의 협력 혹은 산업계, 국립연구기관 등과의 연대강화에 대하여 정부의 공식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써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 부시 정부하에서도 공동연구개발협정(CRADAS)에 의한 국립연구소와 민간기업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러한 수속의 간소화 등이 도모되고 있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국방비의 민수전환이 추진됨으로써 상업화로

연결되기 쉬운 전략적 기술개발의 실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날, 매트릭스형 플랫패널디스플레이의 개발에 국내기업이 결속하여, 여기에 國防省이 지원하는 Project가 공표되었는데, 이와 같은 전략적 관민공동 Project가 활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방침에 따라서 향후 나라의 기술개발 보조금에 대해서도 증액이 기대된다. 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을 위한 합작기업에 대해서도 독금법의 적용제외

를 표명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 하이테크 기업간의 동맹을 지원하는 조치로써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같이 컴퓨터업계에서는 클린턴 新정부하에서는 환경대책 교육 대책과 같이 기업코스트 부담증가로 연결되는 것을 염려하는 소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정비, 규제완화, 하이테크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의 시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China Computer Show '93 & Banking China '93

- 전시기간 : '93. 12. 7~12. 11
- 전시장소 :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북경)
- 주최자 : China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re,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 전시품목 : 1. Chian Computer Show '93 Terminals, Mianframes, Mini Computers, Micro Computers, Workstations, network sys-

- tems, Peripherals, S/W 등
- 2. Banking China '93 Automatic Teller Machines, Cash Management System, Computer Systems and Peripherals for Banking 등

- 문의처 : Adsale Exhibition Services Ltd. (홍콩소재)
Tel : (852) 511-0511
Fax : (852) 507-5014